월요광장

긍정적 중독은 없다

문 요 한
정신과 의사

여행 중독이란 것도 있을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을 찾은 G라는 여성이 그러했다. 그녀의 주된 문제는 지나친 해외여행으로 인한 카드 빚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에 지쳐 한 번씩 다녀온 해외여행은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활력을 주었다. 덕분에 담을 쌓고 있던 외국어 공부도 덤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올수록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은 점점 더 고역으로 느껴졌고 시간만 나면 여행을 떠나곤 했다.

덕분에 그녀의 여행 블로그와 SNS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여행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여행지와 숙소를 찾아다녔다. 여행을 가고 싶어서라기보다 가야 할 것 같아서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휴식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생생한 여행기를 올리느라 여행지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다. 그녀의 여행은 어느덧 노동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여행 마니아라고 했다. 그렇게라도 여행을 다녀와야 살 것 같다고 했다. 여행은 고달픈 삶을 위로하는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알코올 중독자들과 상담을 할 때 많이 듣던 이야기였다. 사실 많은 중독자들은 스스로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게임 중독자들은 게임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본인만 부정할 뿐,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G의 경우처럼 눈에 띄지 않는 중독들이 있다. 운동 중독, 일 중독, 여행 중독, 공부 중독, 신앙 중독, 취미 중독 등이다.

이러한 중독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인다. 일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늘 끊임없이 배우러 다니고, 취미 활동에 몰두하고, 신앙 활동에 열심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지런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부러움이나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마니아를 넘어 중독자들이 많다.

즉, 즐기는 것이 아니라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활동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 아픈데도 일을 놓지 못하고,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데도 고강도의 운동을 지속하고,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월급만 타면 여행을 떠나거나 기호품을 사고, 생활은 뒷전인 채 신앙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갈망을 조절할 수 없고, 점점 내성이 생겨 그 빈도와 강도가 잦아지고, 중단 시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역기능이 나타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라서(William Glasser)는 '긍정적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좋은 중독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쁜 중독에 비교하여 좋은 중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했다. 첫째, 생산적이다. 둘째, 장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관계의 양과 질이 확장된다. 넷째, 쾌감만이 아니라 성취감·충만감 등 다양한 정서적 충족이 이루어진다. 즉 나쁜 중독은 삶과 관계에 해롭지만 좋은 중독은 삶과 관계에 이롭다는 것이다.

그는 그 대표적 활동으로 운동, 독서, 명상, 취미 활동 등을 꼽았다.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삶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중독이기에 사실 좋은 중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도, 운동도, 취미도, 심지어 신앙도 중독이 된다. 그것은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언가에 지나치게 빠져 균형을 잃어버리는 집착적 혹은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타민처럼 부족한 것도 병을 만들지만 지나친 것도 병을 만든다.

우리는 좋은 여가 생활을 위해 몰입과 중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절대적인 경계는 없다. 중독이란 쉽게 말해 그것만 좋고 나머지는 싫어지거나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여행 중독이라고 하면 여행 외의 일이나 일상은 다 귀찮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이고, 신앙 중독이라고 하면 신앙 외의 것은 관심이 가지 않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여행만 가려고 하고 신앙 활동만 하려고 한다. 그에 비해 몰입은 다르다. 몰입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좋아진다. 여행이 좋았기에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신앙이라면 그 영적 기쁨으로 일과 관계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큰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 행복을 마냥 미루기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과 삶과 관계의 균형이다. 일밖에 모르는 것도 병이지만 여가밖에 모르는 것도 병이다. 건강과 활기는 균형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독이 아니라 몰입이고 고달픈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법조칼럼

의무 이행 소송 도입에 관하여

이 정 훈
변호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8일 의무 이행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무 이행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내리도록 판결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인정돼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달리 판결 취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예컨대 구청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법원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주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 이행 소송이 도입되면 법원이 구청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판결할 수 있게 돼 당사자의 권익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된다.

필자의 경우 몇 년전 의뢰인을 만나 행정 관청을 상대로 절차 및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

해당 법원은 절차 위반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아쉽게도 의뢰인의 내용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원·피고 양 당사자에게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결국 비례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행정 관청은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재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거부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때 필자는 만약 의무 이행 소송이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의무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때 거부 처분은 함께 취소된다.

의무 이행 판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며, 행정청이 의무 이행 판결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 등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이행 소송이 도입되면 한 번의 소송으로 행정청의 의무 이행까지 요구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익 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외에도 산업 재해 급여, 신축 건물 인·허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의무 이행 소송 도입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대법원이 지난 2002년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처음 논의를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무려 16년이나 지났다.

지금은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재처분이 구제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시 행정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각하하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아 법원이 피신청인(청와대)에게 승낙을 하도록 명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소송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돼 행정 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가 의무 이행 소송을 통해 더 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 고

혁신도시 시즌2와 지역 균형 발전

김 병 규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요즘 지방 분권 개헌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정부의 균형 발전 비전을 구현하고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새 출발을 알렸지만, 오래 전부터 지방 분권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온 국가 정책은 '혁신도시'이다.

과거 기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성장 정체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전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말 기준 15개 기관이 옮겨와 인구 2만8266명의 자족도시가 생성되었다. 또 지방세(전남도세, 나주시세) 2924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지역 인재가 1154명 채용되는 등 혁신도시 조성이후 지역 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의도했던 대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드는 데에는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 대학 등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해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사회·문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별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난 2월 1일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정착 및 도시 안정화,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 3대 전략과 이전기관 지역 발전 선도, 스마트도시 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혁신도시 추진 체계 재정비 등 5대 추진 과제로 짜여 있다.

2007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착공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혁신도시 시즌1'에서는 신도시 기반 조성과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주요 과제가 하드웨어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 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 중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시작하는 주변 지역과 균형적 상생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광주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시즌2'는 추진 전략과 과제가 정부 역점 국정 과제인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란 한정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주변지역과의 상생·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시즌2'에 당면하여 효과적인 지역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서 광주시에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혁신도시 인접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상생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광주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남구 대촌동에 국가 산업단지 48만6000㎡, 지방 산업단지 94만4000㎡를 마련하고,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및 직류(DC)기반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4대 주력 산업(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및 2대 경제 협력권 산업(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차) 육성을 위한 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 인재 양성과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지역 혁신 주체와의 연계 및 상설협의체 구성 등 통합 전략도 마련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유치하고 조성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서 인접 지역과 더불어 광주·전남 발전의 성장 거점 도시가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하루속히 펼쳐지도록 올해부터 시작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추진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집중해야 할 때이다.

社 說

전직 대통령 잇단 구속…이번이 마지막이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10여 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잇따라 구속되는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다수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이다. 더욱이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구속이 벌써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엊그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와 민간 영역에서 받은 불법 자금,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에 가까운 횡령 등 그 내용도 중대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부터 도곡동 땅과 다스 소유설을 부인해 왔지만 1987년 다스 창업 때 자금을 대고 12년간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며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이런 혐의가 2007년 대선 직후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영장 실질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치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구속된 부끄러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치 보복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이 전 대통령이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열 명 중 네 명 전과자라니

광주·전남 지역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40%가량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앞으로 공천 심사를 할 때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주 지역 예비후보자 현황(지난 22일 기준)을 보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26명으로 이중 40%가량인 1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도 있지만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기·횡령 등도 있다.

특히 한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해 버젓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지역의 경우도 이날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 212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41.5%에 해당하는 88명에 달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 18명 가운데 7명(38.9%)이, 전남도의원 등록자 89명 중 36명(40.4%),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102명 가운데 44명(43.1%)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성을 의심받을 이유는 없다. 민주화 운동 과정 전과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범칙금 사례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과자가 많은 것은 당이 일부 예비후보들의 소명만 듣고 통과시키는 등 부실 검증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허위로 소명한 예비후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사할 때는 범죄 경력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받아 보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황제의 귀환

언론이 권력이라는 철벽에 맞닥뜨리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그 권력이 생살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면 비굴한 처신도 마다하지 않는 언론이 적지 않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815년 당시 프랑스의 유력지 '르 모니퇴르 유니버셜'의 처신이다. 1815년 2월 26일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3월 20일 파리에 입성할 때까지 모니퇴르의 1면 기사는 그야말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다. 3월 9일자에 '식인귀 소굴에서 탈출'이라던 제목은 그 다음 날인 10일엔 '코르시카 출신 도깨비, 생장드루즈에 상륙'으로, 11일 자에는 '호랑이, 까르푸에 나타남'으로 톤이 서서히 달라진다. 이어 12일자에는 '괴물, 그르노블에서 야영'이라고 쓰더니 13일엔 '폭군, 리옹 도착'으로, 18일엔 '찬탈자, 60마일 더 오면 파리 도착'으로 나폴레옹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바뀌어간다. 19일자엔 '보나파르트, 무장군 이끌고 전진'이라며 제목이 중립적으로 변하더니 20일엔 '나폴레옹 내일 파리 도착 예정' 그리고 21일엔 '황제 나폴레옹 지금 퐁텐블로궁에 도착'에 이어 22일엔 '황제 폐하 어제 파리 튈르리궁에 환궁'이라며 변신의 극치를 보여 준다.

혀를 차게 만드는 이런 언론의 변신은 안타깝게도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바로 얼마 전엔 중국 인민일보의 '표변'이 입살에 올랐다. 인민일보는 지난 2011년 3월 사설에서 당시 일부 지방 공산당 위원회 선거에서 나타난 만장일치 선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만장일치 당선은 민의를 민의를 납치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출되자 "당과 인민, 국가 의지의 단결력을 충분히 보여 준 것"이라고 표변했다.

권력 앞에 고개 숙인 언론으로부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모니퇴르와 인민일보의 변신에는 모두 내부적으로 진통과 고통이 있었으리라 믿고 싶다. 바로 그 고통이 언론을 언젠가는 새로운 탄생으로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